

# 2016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을 경우 이는 위법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
- ㉢ 원심까지 본건을 심리하느라고 그 구속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갱신하였다 하여 반드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불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반한 경우의 구제책에 대하여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아라비아해 인근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이송되어 국내 수사기관에 인도된 후 구속·기소된 사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로서 '현재지'에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 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하므로, 국내법원은 토지관할이 있다.
- ②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피고인들을 인도받은 때이다.
- ③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 가운데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구속의 이유 등을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피고인들을 체포한 청해부대원의 진술은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다.

3. 다음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수는 모두 몇 개인가?

- ㉠ 공소장일본주의      ㉡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 형사보상청구권      ㉣ 사후 영장에 의한 체포
- ㉤ 무죄추정의 원칙      ㉥ 집중심리원칙
- ㉦ 구두변론주의
- ㉧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 ㉡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은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급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 ㉣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급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공범관계에 있는 甲, 乙이 사자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 ③ 고소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다.
- ④ 고소는 범죄사실을 특정해서 행해져야 하지만 고소인 스스로가 직접 범행의 일시 및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

# 2016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6. 불심검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질문을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를 정지시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질문을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통신제한조치 또는 감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8.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교도관으로부터 그가 보관하고 있던 재소자의 비망록을 증거자료로 임의 제출받아 이를 압수한 경우, 비망록에 재소자의 사생활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압수절차가 피고인의 승낙 및 영장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출판내용에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그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압수하는 것은 행정적인 규제로서의 사전검열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다면,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 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압수는 위법하지 않다.

④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9.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신문 중이라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의자의 진술은 참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동의하에 영상녹화 할 수 있으나,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 하여야 한다.

# 2016년도 간부 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법원도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측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며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 ②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면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 신문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③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거주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자, 법원이 소송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 보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명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는 것은 위법하다.
  -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1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한 때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관할구역 외의 사법경찰관리의 촉탁을 받아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함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의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13.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녹화된 자료)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②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가 완료된 후 그 원본을 봉인함에 있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을 따로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 2016년도 간부 후보생 (경 위) 채용 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4.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이에 대해 증거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③ 긴급체포시 압수한 물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④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하여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동의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5.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에 앞서 피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는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③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 그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④ 법정 옆 피고인 대기실에서 재판대기중인 피고인이 공판 20분을 앞두고 호송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1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사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은 위법하고,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아래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검사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나, 동법 제416조에 정하는 준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17.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검사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같다.

③ 권리구제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6년도 간부 후보생 (경 위) 채용 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18.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는 전제하에 증인에게 반대신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조서 중 피의자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형사입건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 ④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19.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교사범에 있어서 교사의 사실
- ②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사실
- ③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
- ④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하는 사실

20. 재정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권자의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없으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 공동신청권자 중 1인의 재정신청은 그 전원을 위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그 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재정신청을 취소한 자는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재정신청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 ③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체포·구속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법원의 석방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체포 또는 재구속 할 수 있다.
- ④ 동거인이나 고용주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

2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여 실체법상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 2016년도 간부 후보생 (경 위) 채용 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2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공소시효란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공소제기 없이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이다.</p> <p>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p> <p>③ 공소시효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p> <p>④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p>	27. 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였다더라도 유죄 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p> <p>② 상소의 제기,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p> <p>③ 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 할 수 있다.</p> <p>④ 필수적 몰수·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라도 상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p>
25.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공소제기 후라도 임의수사는 허용된다.</p> <p>②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이므로 공소제기 후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의 권한에 속한다.</p> <p>③ 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곧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p> <p>④ 참고인 조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허용되므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다시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반복시킨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p>	28.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추후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도 공소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p> <p>② 검사가 공소제기를 함에 있어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p> <p>③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p> <p>④ 피고인은 법원의 심증형성 후에도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p>
26. 수사상 검증과 감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법원의 검증은 영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수사상 검증은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며 검증목적물은 인체라도 가능하다.</p> <p>②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p> <p>③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p> <p>④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p>	29.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p>① 변호인이 될 자가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선임서를 제출한 경우 위 항소이유서 제출은 적법·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p> <p>②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도 미친다.</p> <p>③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p> <p>④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이 있는 후에도 효력이 있다.</p>

# 2016년도 간부후보생(경위) 채용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p>30.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실체적 경합범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p> <p>②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p> <p>③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p> <p>④ 상업장부, 항해일지 등 사무처리내역을 그때마다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피고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p>		<p>34.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p> <p>①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p> <p>②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이 인정된다.</p> <p>④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신청을 한 자가 수인인 경우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 할 수 있다.</p>	
<p>31.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공판준비절차는 통상의 재판에서는 임의적 절차이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다.</p> <p>②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p> <p>③ 공판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신청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서는 소송이 현저히 지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공판기일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p> <p>④ 공판준비기일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출석할 수 있다.</p>		<p>35.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p> <p>② 공소사실의 기재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이를 특정할 기회를 준 다음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p> <p>③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p> <p>④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p>	
<p>32. 다음 중 특별한 요건 없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p> <p>① 공판준비기일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행한 진술을 기재한 조서</p> <p>② 법원이 주재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조서</p> <p>③ 검사의 청구에 의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참여한 제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조서</p> <p>④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p>		<p>36.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p> <p>②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p> <p>③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p> <p>④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33.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p> <p>① 즉결심판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선고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p> <p>② 경찰서장이 판사의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독립하여 법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 즉결심판청구서에는 즉결심판에 의하여 선고할 형량은 기재대상이 되지 않는다.</p> <p>④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p>			



# 2016년도 간부 후보생 (경 위) 채용 시험 문제지

과 목	형사소송법	응시번호		성 명	
-----	-------	------	--	-----	--

37. 다음중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자인 유아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하였더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② 수사기관에서 시중 일관되게 진술한 피해자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소환당할 당시부터 노인성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분별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 ③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경우.
- ④ 10세 남짓의 성추행 피해자인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판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8.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판례는 자연적·전법률적 관점에서 범죄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기본적 사실동일설을 수정하였다.
- ㉡ 참고인을 협박하여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그 허위진술로써 검거되어 조사받던 자를 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판례는 동일성을 부인하였다.
- ㉢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따르면 실체적 경합관계라 할지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 ㉣ 감금죄의 공소사실과 그 감금 상태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회사 부지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경영권을 빼앗았다는 내용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39.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피고인이 행형법에 의한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행형법상의 징벌은 수형자의 교도소 내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의 일종으로서 형법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습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다른 사기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단순사기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확정판결의 범주에 속한다.

40.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피고인은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 ㉡ 법원에 의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자에정명부를 작성한다.
- ㉣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한 날까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 ㉤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